

文, 신년 회견서 '갈등 관리' 집중...사면 유보·윤석열은 꺼안기

文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 말할 때가 아냐"

"윤석열은 文정부 검찰총장"...갈등 리스크 줄이기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120분간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우선 새해 벽두를 뜨겁게 달궜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국민 분열을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또 법검 갈등 국면으로 존재감이 급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감싸기에 나섰다.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논란의 소지가 됐던 현안들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면서 갈등 지수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文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냐"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된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지금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한편,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

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만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임기 내 추진 가능성은 열어졌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이라고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을 퇴임 전 결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할 적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갈등 리스크 줄이기

문 대통령은 윤 검찰총장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제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과의 갈등 국면을 더 이상 키우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윤 총장 감싸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추미에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부각된 데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거 같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국면과 관련해서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제도가 돼 있다"며 "그래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한편 한창 논란이 됐던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실패 재인...'공공주택 발 등 공급 특별대책 마련'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부동산 투기(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투기 억제에만 집중했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 이유로 세대수 급증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작년 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었다. 예정에 없던 세대수의 증가"라며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그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백신 접종 신뢰 확보한 文...'부작용 시 정부가 전적 책임'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9월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안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해도 된다"며 "백신의 접종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심지어 부작용 사례들까지도 우리가 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접종 사례를 보면서 한국은 (부작용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께서 우리 한국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보다 신뢰도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그러나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그런 경우의 우리 한국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반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 까라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여권서 군불 '이익공유제-4차 재난지원금' 선 그는 文대통령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제기되는 이익공유제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또 거기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2021년도 예산안도 막 집행이 시작된 단계의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며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단언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김종인 "코로나 국민 희생의 손실 보전해야...정부 대책 필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 제한, 선택권 박탈, 국민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손실 보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함 보상

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실 보전 규정이 있다. 지난해부터 우리 당도 손실 보상을 위한 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듭 말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업종과 업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코로나의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작년 말 예산국회에서 3차 재

난보상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색한 자세를 취하면서 겨우 3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해 금년 들어와서 지급하면서 다른 예산에서 짜서 9조원을 했는데, 이것으로는 절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메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안철수 "교육은 보편 복지,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교육 복지는 교육 대상자 모두에 대해 보편복지가 원칙,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대해서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느 한쪽만 고집하고 원칙으로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따라 어떤 부분은 보편 복지가 더 적절하고 어떤 부분은 선별 복지가 적절하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손주 돌봄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손주를 돌보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두 다 지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재원도 충분히 서울시 예산 조정을 통해

따로 세원 확보를 안 해도 현 재원으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시기로 3월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단일화 이루겠다"고 답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